

목포대·도립대 통합 본궤도...“글로벌 대학 도약하겠다”

통합 실무 첫 회의 개최...6월까지 협상 완료 8월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긴밀 협조키로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통합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22일 목포대 스마트 회의실에서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Kick off (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두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1일 대학 통합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Kick off는 통합선언 이후 첫 공식 실무 회의다.

이들은 대학 통합 현안에 대한 사전분석,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통합 방안, 경쟁력 있는 통합대학 운영 전략,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두 대학은 통합을 통해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대학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공유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지난 1월 11일 대학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2월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두 대학이 통합하면 국립 전남대가 2006년 수산 분야 특성과 대학인 여수대와 통합한 이래 광주·전남에서 두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두 대학은 구성원 대표를 비롯해 양 대학 동수로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6월 말까지 통합 실무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기초지자체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 통합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전남도립대와 통합을 골자로 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2024년 글로벌(Glocal, Global+Local)대학 30 사업에 공모, 예비대학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대학 지원책이다.

목포대는 혁신기획에서 목포대를 그린해양 산업·전문인력 양성 특성과 대학으로 육성하고 전남도립대는 해양산업 글로벌 우수 산업 기능인 양성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두 대학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를 겨냥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남도립대 조명래 총장은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전남도, 지자체와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목포대가 2024년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도록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2024년 글로벌 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전남 지역에서 제일 큰 글로벌 거점 국립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캠퍼스 체전 열전

광주대학교 체육대학인 '호심체전'이 23일 대학 내 운동장에서 열렸다. 단과대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이색적인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수방관’ 5·18 진상조사위

“핵심 조사 대상자 자료 폐기 시도 파악하고도 자료 확보 안해” 제1회 5·18연구자대회서 주장...“권한 활용 못해 부실 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핵심 조사대상자의 자료은닉과 폐기시도를 파악하고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2021년 2월 확인했다.

김희송 전남대5·18연구소 교수는 23일 열린 ‘제1회 5·18연구자대회’에서 “5·18조사위가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한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부실한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는 전남대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 등이 개최했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실제 조사는 하지 않고 조사위 실무진이 조사한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1980년 505보

안대 대공과장을 지낸 서모씨가 5·18 관련 핵심군 자료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1년 2월 확인했다.

그는 1988년 5·18 관련 군자료를 왜곡·변조한 511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진상조사위가 서씨를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고 연락과 조사를 시도하자, 서씨는 군 자료를 고물 상에게 넘겨 폐기하도록 했다.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라는 점을 간파한 고물상은 진상조사위와 언론사 등에 자료 습득 사실을 알리고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여

앞둔 2023년 11월 16일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회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사 기간이 빠듯했던 터라 결국 사씨의 자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자료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교수는 “5·18조사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회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다”며 “5·18진상규명에 대한 되묻기와 아울러 진상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5·18 44주년과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3주년을 기념해 열리며 24일까지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을 주제로 개최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표리부동’ 5·18 부상자회

회계비리 감사 결과에 “사죄”...뒤로는 “사실 아니다” 반박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최근 회계비리를 들춰낸 보훈부 감사 결과(광주일보 5월 7일자 6면)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재심의 신청’을 보훈부에 제출한 후 나온 사과여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부상자회는 23일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부상자회의 회계비리에 대해 단체를 책임진 회장으로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질책과 비판이라도 감수할 것임을 굳게 천명한다”며 “아울러 회계비리의 내용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자회는 사과에 앞서 지난 16일 보훈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9건 중 7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회 상근 간부의 수당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는 실제로 상근했다’고 설명했으며, 법안처리량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안에는 ‘출장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는 등 해명을 내놨다.

황 회장은 재심의 신청서에서 “회장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속인 일 없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며 “비선 실세 일당이 이사진을 장악해 은밀

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에는 동의하나, 법을 직접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로자회도 감사로 적발된 8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냈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것냐”고 반문했다.

한편 보훈부는 최근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에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하고 황 전 부상자회장 등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1명에 대해 배임,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주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광에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설치 중단하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광주·전남 환경단체와 영광 지역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절차(5월 22일 광주일보 12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지역과 소통하지 않은 채 건설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한수원은 저장시설 용역을 멈추고 한빛 원전 수명연장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지난해 4월 ‘한빛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안’ 의결 당시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영광 지역민들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미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지질조사를 하면서도 현재까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수원이 약속 위반을 인정하고 설계용역 중단해야하며, 영광군도 지질조사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도 지역주민

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주민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 및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 것이 의견수렴의 절차지만 영광군의 보완 요구에 맞서 행정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응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한수원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과 수명연장 과정에서 아무런 소통도 없이 영광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명연장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사업의 진행이 알려질 경우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숨긴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지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